

상속받은 주식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의제배당 점검과 실행 설계

회계법인 리파인드 상증센터

상속감자 제안서

작성일 2026. 11. 2.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01

서비스 개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이 사들여 소각하고, 그 대가로 상속세를 내는 방식

검토 결론

소각대가와 상속세 신고 평가액이 같으면 의제배당은 0원이고 배당소득세도 0원입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의제배당 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리파인드 상증센터가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충족하는 건만 실행합니다.

성립 조건 4개

1
평가기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과 법정결정기한

2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 부수비용을 더한 금액

3
배당가능이익 한도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4
소각할 주식의 특정
상속받은 주식임이 결의 서류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분께

- 상속세를 낼 재원을 상속받은 주식의 소각으로 마련하려는 분
- 소각대가를 얼마로 정해야 세금이 없는지 알고 싶은 분
- 상속인이 여럿이고 특정 상속인의 주식만 소각하려는 분
- 가업상속공제나 연부연납을 쓰고 있거나 쓸지 검토 중인 분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1 평가·재원 진단	보충적 평가로 현재 주식 평가액을 확정하고 배당가능이익과 현금, 주주별 주식 취득 내역을 정리합니다. 예상 상속세와 감당 가능한 재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2 신고·분할협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증법 §67①·④). 분할협의에서 소각 대상 주식을 특정 상속인에게 모으고 연부연납 기간을 소각 계획과 함께 정합니다.
3 취득·소각 실행	전 주주 통지와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양도신청기간을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사회 결의로 소각합니다. 소각가의 기준은 신고 평가액입니다.
4 사후 관리	법정결정기한까지 소각가와 신고 평가액의 일치를 설명할 자료를 유지합니다.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를 정리하고 소각대금이 상속세 납부로 이어진 계좌 기록을 남깁니다.

자료를 받은 뒤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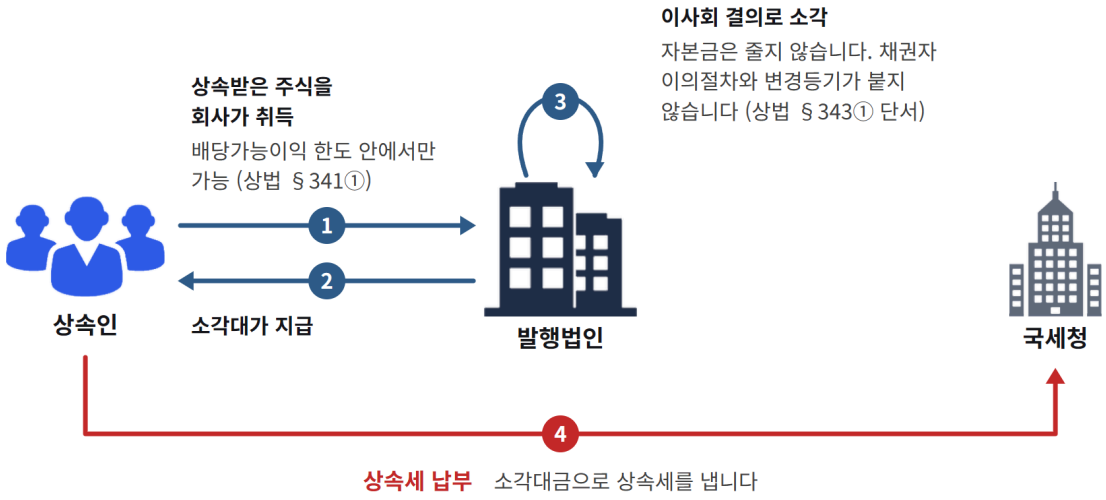
02

거래 구조와 세금 계산

이름은 감자이지만 실무 경로는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입니다

발행법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취득합니다(상법 §341①). 이사회 결의로 소각합니다(상법 §343① 단서). 자본금은 줄지 않아 채권자 이의절차와 변경등기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받은 소각대가로 상속세를 냅니다.

도해 1. 상속감자의 거래 흐름



주주가 받는 소득의 세목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의제배당)입니다.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소각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 = 의제배당

소각대가가 취득가액 이하이면 의제배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그 주식을 산 적이 없지만 취득가액이 0원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적은 평가액이 취득가액의 기본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17①3호·§17②1호, 소득46011-346(1999.11.12), 서면-2017-소득-2269(2017.11.3)

03 판단 기준 한눈에

소각대가를 신고 평가액과 맞추면 의제배당이 없고, 벗어나면 세금이 다른 쪽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소각대가가 신고 평가액보다	의제배당	세금
같을 때	0원	의제배당과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소각가가 시가와 같다는 전제에서 증여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넘을 때	초과분이 배당소득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낮을 때	발생하지 않음	자본금 감소 방식에서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검토됩니다 (상증법 §39의2). 자기주식 소각 방식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 의제배당에도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은 명목 최고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의 자본 감소분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4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6개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확인 없이 실행하면 0원 계산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평가기간과 법정결정기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소각대가는 매매가액으로서 상속재산의 시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고기한부터 9개월인 법정결정기한까지는 납세자 등이 신청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각가를 신고 평가액과 같게 두면 소각가가 시가 판단에 쓰이더라도 상속세와 의제배당이 함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상증령 §49①·§78①1호

2 총평균법과 주식의 특정

상속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섞여 있으면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해 평균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소각 대상이 상속받은 주식이라는 사실이 결의 시점의 서류에 드러나야 합니다

3 불균등 소각과 증여세

특정 상속인의 주식만 소각해 남은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자본금 감소 방식에서 소각 가격이 시가에서 벗어나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기준금액 3억 원이 영이 되어 전액 과세됩니다

근거: 상증법 §39의2①, 상증령 §29의2②

4 지급 한도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이익잉여금, 배당가능이익, 통장의 현금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실제 지급은 현금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순자산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취득이 금지되고, 취득하면 이사에게 연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상법 §341① 단서·③·④, §462①

5 채권자 이의절차와 정관

자본금 감소 경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 1/3 이상)와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절차를 밟습니다. 이익소각 경로는 두 절차가 없고, 대신 전 주주 통지와 균등조건이 붙습니다.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취득 결의를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어 결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근거: 상법 §434·§438·§439②→§232, §341①2호·②, 상법 시행령 §9①1호·§10

6 가업상속공제·연부연납과의 관계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은 5년간 줄일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이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연부연납 20년(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증령 §68③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상속재산)을 받은 뒤 기업상속재산(해당 법인 주식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허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각을 처분으로 보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제도의 적용 여부를 소각 설계보다 먼저 확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식을 나눕니다. 후계자는 공제를 받아 지분을 유지하고 공제를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주식을 소각 대상으로 삼습니다. 연부연납 10년에는 이 처분 제한이 없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18의2⑤3호, §71②1호·④4호, 상증령 §68④·⑥1호·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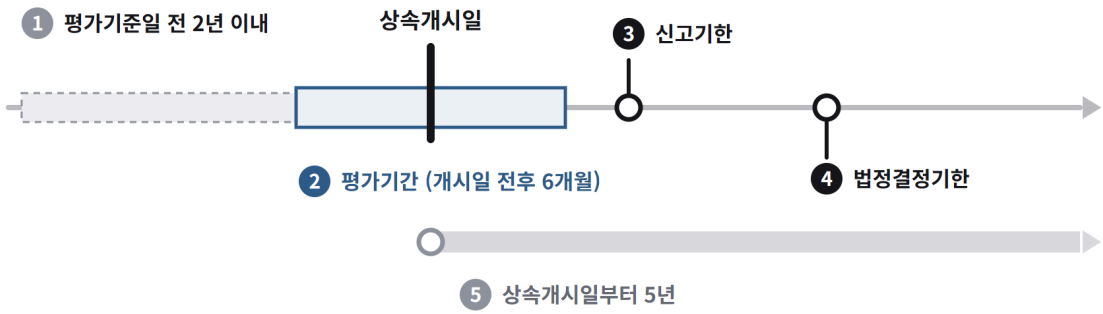


05

평가기간과 판정 순서

기간 도해와 소각 설계 판정 순서

도해 3. 평가기간·신고기한·법정결정기한



※ 눈금은 기간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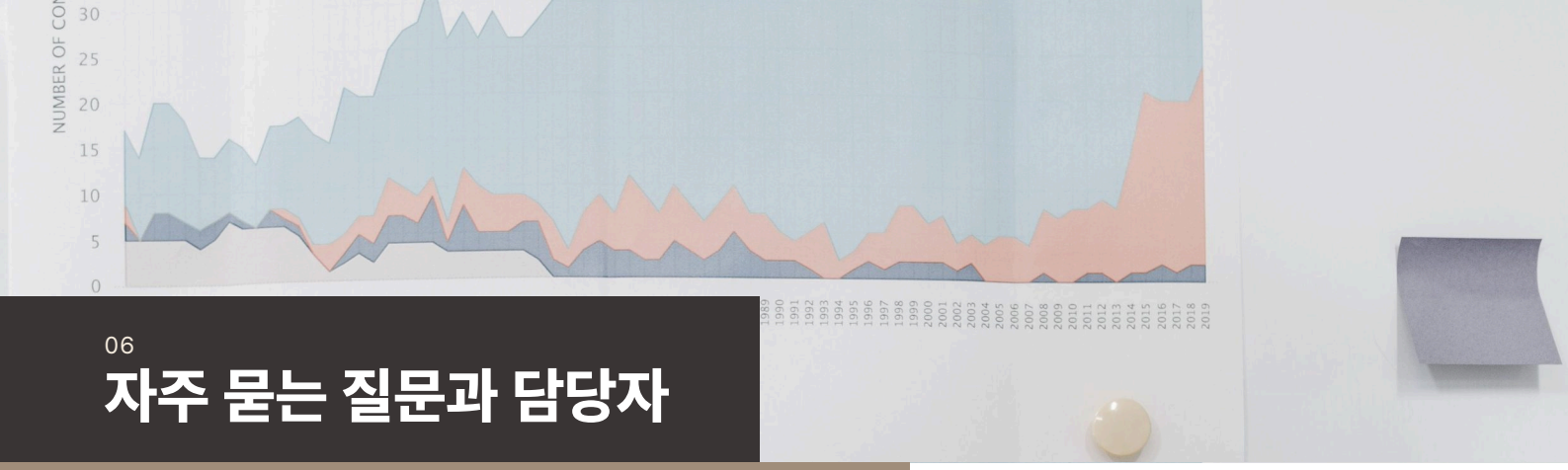
도해 4. 소각 설계 판정 순서

질문	답에 따른 판단
1.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주식입니까?	예: 공제받은 상속인의 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줄일 수 없습니다(상증법 §18의2⑤3호, 상증령 §15⑫1호·⑮·⑯). 후계자는 공제를 받아 지분을 유지하고, 공제를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주식을 소각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니오: 질문 2로 갑니다
2. 연부연납 기간을 몇 년으로 신청합니까?	20년: 기업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허가 변경·취소 사유가 됩니다(상증령 §68④·⑥1호·⑧). 2023.1.1 이후 상속개시분에만 적용됩니다 10년: 이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각 대상이 특정 상속인의 주식뿐입니까?	예: 자본금 감소 방식을 검토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감소의 방법을 정하고,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절차를 밟습니다(상법 §438·§439) 아니오: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입니다. 전 주주에게 통지하고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며, 신청이 몰리면 비례 안분합니다(상법 §341①2호, 상법 시행령 §9①1호·§10)
4. 지급액이 한도 안입니까?	법적 한도는 배당가능이익, 실제 한도는 대개 통장의 현금입니다. 둘 중 작은 쪽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상법 §462①·§341① 단서)
마지막 단계	소각대가를 상속세 신고 평가액으로 정하고, 소각대금이 상속세 납부로 이어진 계좌 기록을 남깁니다

보수

보수는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주식 평가액, 배당가능이익, 주주별 주식 취득 내역. 이 3개가 있으면 이 구조가 성립하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재무제표 한 장으로 첫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상증센터에서 상속감자를 맡는 회계사입니다.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세금이 0원이 된다는 계산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의제배당은 소각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각대가를 신고 평가액과 같게 정하면 뺄셈의 결과가 0이 되고 배당소득세도 0이 됩니다. 평가액을 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고,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신고 평가액을 낮게 잡으면 상속세는 줄지만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소각 계획까지 놓고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17②1호, 소득46011-346, 서면-2017-소득-2269

Q2.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에 소각하면 안전한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고, 이 안의 소각대가는 시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각가가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면 15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신고기한이 9개월이라 더 늦어집니다. 앞쪽으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도 같은 절차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점이 아니라 가격이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근거: 상증령 §49① 단서, §78①1호, 상증법 §67①·④

Q3. 상속인이 여럿인데 한 사람의 주식만 소각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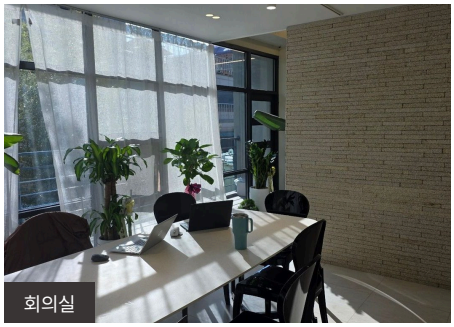
자기주식 취득 방식으로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시세가 없는 주식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뒤 신청이 몰리면 비례 안분됩니다. 특정 상속인의 주식만 소각해야 한다면 자본금 감소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감소의 방법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남은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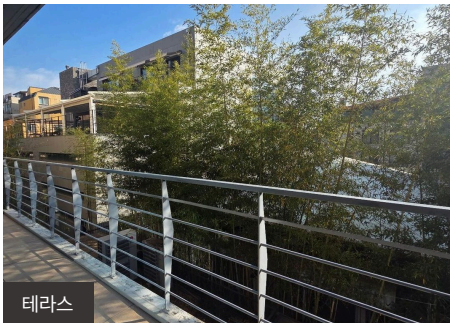
근거: 상법 §341①2호, 상법 시행령 §9①1호·§10, 상법 §438·§439①

담당 회계사

이름	직위	전문 분야
이종헌	대표 회계사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임연희	부대표 회계사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이현우	파트너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장하리	이사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개인 재산제세 업무


대기 라운지


회의실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